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5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3.

발 의 자 : 권영세 · 이성권 · 김소희
김재섭 · 서일준 · 고동진
안철수 · 구자근 · 김승수
강대식 · 인요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게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‘스토킹행위’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,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
이에 ‘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’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

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전기통신”을 “전기통신 또는 「우편법」 제1조의 2제1호의 우편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“전기통신”을 “전기통신 또는 「우편법」 제1조의 2제1호의 우편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<u>전기통신</u> 을 이용한 접근 금지	2. ----- ----- <u>전기통신 또는 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</u>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	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----- ----- -----

<p>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톡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<u>전기통신</u>을 이용한 접근 금지</p> <p>3의2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전기통신</u></p> <p><u>또는 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1</u></p> <p><u>호의 우편물</u>-----</p> <p>3의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